
지역간 상생발전이 대한민국을 키웁니다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

- 일시 : 2013년 1월 30일(수) 14:00~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 주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행사일정

시 간		진 행 순 서	
13:30 ~ 14:00	30분	□ 등록 및 안내	
		□ 개회식	
14:00~14:05	5분	개회 및 내빈소개	이원빈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14:05~14:10	5분	인사말	홍 철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14:10 ~ 14:15	5분	경과보고	이원섭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 주제발표	
14:15 ~ 14:45	30분	■ 발표① : 김정호 교수 (KDI, 前 강원발전연구원장)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	
14:45~15:15	30분	■ 발표② :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	
15:15~15:45	30분	■ 발표③ : 이정식 교수 (前 국토연구원장) -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	
15:45~16:00	25분	□ 중간휴식	
		□ 종합토론	
16:00~17:00	60분	토론사회	장명수 명예교수 (전북대)
		지정토론	김의섭 교수 (한남대)
			박시현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갑 교수 (동의대)
			손균근 부장 (국제신문)
			염돈민 센터장 (강원발전연구원)
			이상대 부장 (경기개발연구원)
			이재훈 교수 (영남대)
			장성수 교수 (제주대)
			조상필 실장 (전남발전연구원)
			황희연 교수 (충북대)

발표①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김정호 교수 (KDI, 前 강원발전연구원장)



차 례

- Ⅰ. 지역의 어제와 오늘
-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 Ⅲ. 지역발전의 미래상
- Ⅳ. 주요 추진전략
 1. 지역 일자리 창출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농어촌 활성화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1. 대한민국: 영광과 도전

-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압축성장”

1962년 ~ 1980년

- 경제적인 부와 함께 “민주화” 달성

1980년대 ~ 1990년대

- 향후 도전 : “4대 갈등 · 양극화” 해소와 30-50클럽 가입

2000년대 ~ 2010년대

2010년대 ~ 2020년대

2020년대 ~ 2030년대

I. 지역의 어제와 오늘

2. 지역의 현주소

-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취약한 지방경제
 - 수도권 집중 현상
 - 수도권 집중률
- 강력한 중앙권력과 지방의 영향력 약화
 -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권
 -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
- 지역간 삶의 질 격차와 일자리의 불균형
 - 지역별 삶의 질 격차
 -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 지역 상생발전의 미흡
 - 지역 간 협력 강화
 - 지역 간 상생발전

- 지역 상생발전의 미흡

1. 지역의 어제와 오늘

3. 지역정책의 추이

- 참여정부 이전
- 참여정부 : 과감한 균형발전정책 수립, 집행
- 이명박 정부 : 광역적 성장기반 구축

- **이명박 정부 : 광역적 성장기반 구축**



II.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1. 반성과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반성과 비판

- ◆ ...
- ◆ ...
- ◆ ...
- ◆ ...

●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 ...
- ◆ ...
- ◆ ...
- ◆ ...
- ◆ ...

Ⅱ. 지역정책: 반성과 새로운 방향

2. 정책 내용과 참여 주체의 기능

●

- ◆ 정책 방향 : 공공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전, 문화 진흥, 사회 복지 증진, 주민 참여 확대
- ◆ 주요 사업 : 도시 재생 사업, 지역 특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환경 친화적 건축물 조성, 문화 시설 확충,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 추진 계획 : 1.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2. 사업 계획 수립, 3. 사업 추진, 4. 성과 평가
- ◆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환경 보전, 문화 진흥, 사회복지 증진
- ◆ 추진 방안 : 1. 주민 참여 확대, 2. 민간 기업 유치, 3. 공공 서비스 강화, 4. 환경 보전 강화

●

- ◆ 정책 기조 : 공공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전, 문화 진흥, 사회 복지 증진, 주민 참여 확대
- ◆ 주요 사업 : 도시 재생 사업, 지역 특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환경 친화적 건축물 조성, 문화 시설 확충,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 추진 계획 : 1.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2. 사업 계획 수립, 3. 사업 추진, 4. 성과 평가

9



지역발전의 미래상

· 지역발전의 미래상

1.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 지역발전의 미래상

2.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경제권’ 구축



1. 지역 일자리 창출

1) 왜 지역 일자리가 중요한가?

1. 지역 일자리 창출

2) 그 동안 지역정책은 일자리보다는 산업육성에 치중

1. 지역 일자리 창출

3)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



17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18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①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19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② 대학중심 산학협력에서 기업중심 “산학융합”으로 전환



20

1. 지역 일자리 창출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③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21

1. 지역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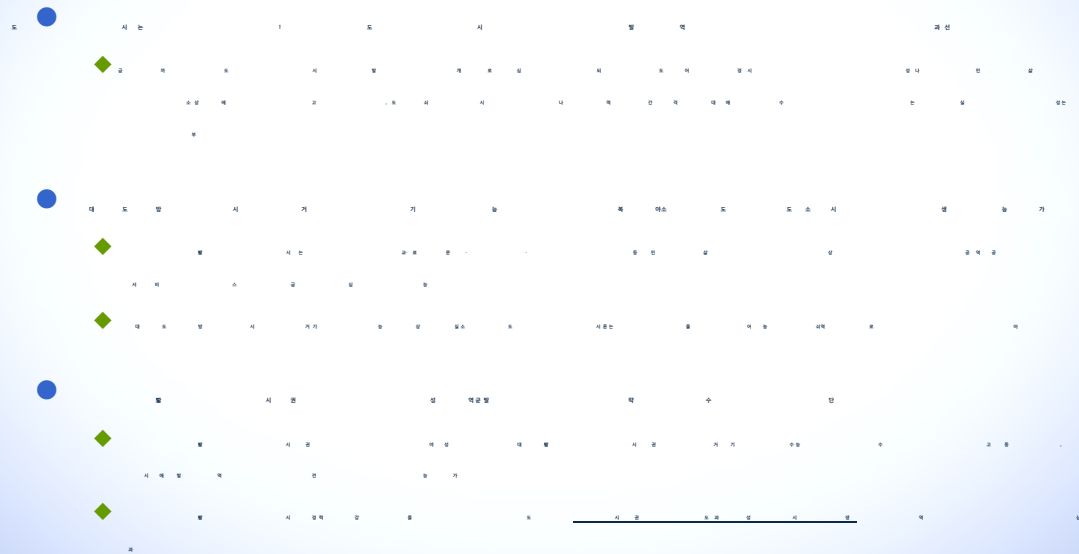
4)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④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를 확립

22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25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① 지방 중추도시권의 설정과 특화 육성



26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②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27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③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8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④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



29



3. 농어촌 활성화

1) 농어촌의 오늘과 내일



31

3. 농어촌 활성화

2)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32

3. 농어촌 활성화

③ 귀촌·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귀촌·귀농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귀촌·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귀촌·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귀촌·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 ◆ 귀촌·귀농 희망자 지원

35

3. 농어촌 활성화

④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36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1) 재정지원의 한계와 확대 필요성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 ◆ 국·도·시·군·구·읍·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 - ◆ 국·도·시·군·구·읍·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① 광특회계 개편 및 운영효율 제고



41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42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43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44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3)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 개선 방안

② 지역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45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1) 지역정책 집행체계: 현황 및 문제점



47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①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48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② 지역 집행기관의 역할 강화



49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③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50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④ 지역정책 평가제도 개선



51



감사합니다

발표② : 중부경제권 구축방향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허재완 [중앙대]



INDEX

I. 왜 중부경제권인가?



'광역경제권(MCR)' 개념의 유지는 필수적

- 국경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의 경쟁단위
 - * 서울의 경쟁상대 → 부산 or 동경.북경 ??
- 경쟁을 이기기 위한 각국의 노력
 - * 인근 국가와 협력 → 지역경제블록의 형성: EU (27개국)
 - * 인근 도시와 협력 → 광역경제권의 형성(MCR: Mega-City Region)
- 협력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 경쟁력 있는 글로벌광역경제권의 형성이 필수요건

- 세계 인구의 1/6
- 세계GDP의 60%, 세계기술혁신의 85%



현행 "5+2" 광역경제권의 한계

- 기존의 행정권역을 기계적으로 획정
- * 인위적인 광역권설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작동이 불가능



"5+2" 광역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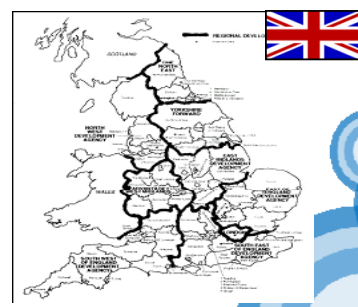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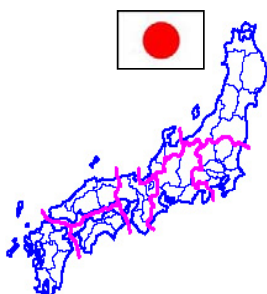
구분	해당구역
서울권	서울특별시(02)
경기·강원권	인천광역시(032), 경기(031), 강원(033)
충청권	대전광역시(042), 충남(041), 충북(043)
영남권	부산광역시(051), 대구광역시(053), 울산(052), 경남(055), 경북(054)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062), 전북(063), 전남(061), 제주(064)



현행 "5+2" 광역경제권의 한계

- 기존의 행정구역을 과도하게 의식 → 진정한 의미의 "광역"이 되지 못함

	면적	개수	비고
일본	377,915 (km ²)	8개	
프랑스	643,801 (km ²)	6개	
영국	243,610 (km ²)	9개	
한국	99,720 (km ²)	7개	5+2 광역경제권



실질적으로 작동가능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

- 광역경제권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도시가 '기러기편대'를 형성하여야 함
- 여기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가 편대장의 역할을 하여야 함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배후 시장이 필요

- 고속(혹은 급행) 교통수단을 활용한 지역간 접근성 구축



실질적으로 작동가능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

-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존재
- 2,4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배후시장
- 지하철, 전철 등으로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음

- * KTX개설로 천안·아산 등의 충청지역이 30분대 출퇴근 지역
- * 경춘선·경춘 고속도로로 인해 춘천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편입 등

- * 세종시와 관련된 교통확충사업 (제2경부고속도로 등)
- * 서울-강릉을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 *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고속철도 및 도로 확충사업
- * 서울-분당-충주 전철확장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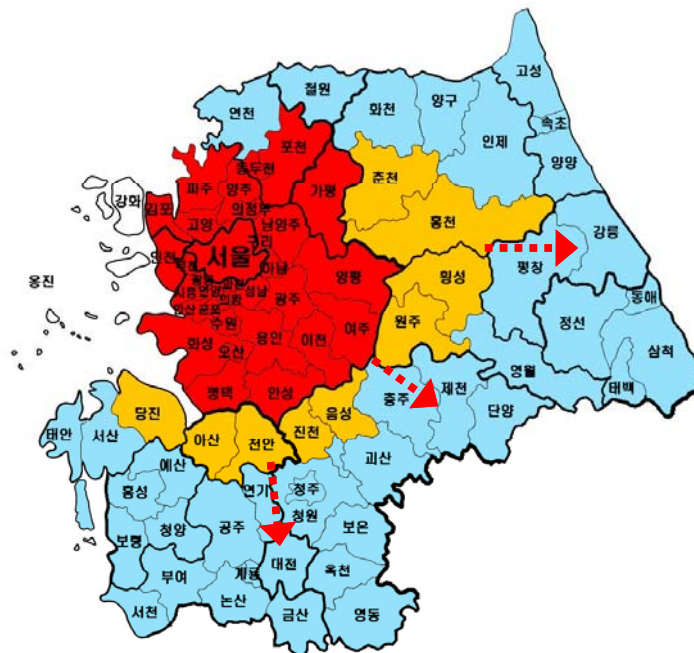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서 '중부경제권' 구축이 필요

-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확대된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 *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권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권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 기존의 교통시스템 및 협의체 정비를 한다면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이 '중부경제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능
- * 이러한 중부경제권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 및 중부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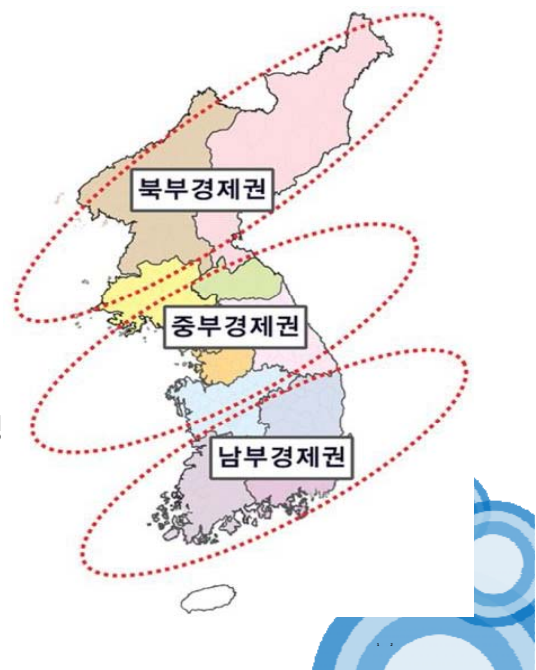


II.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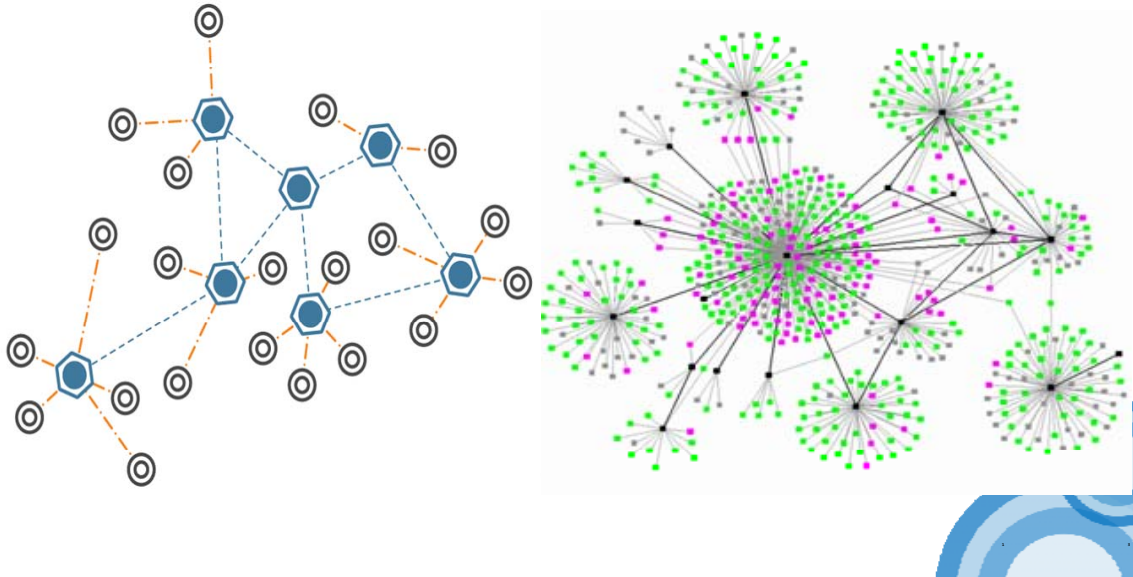
중부경제권의 공간적 범위

- 한반도를 구성하는 3개 광역경제권의 하나
 - * 북부경제권 - 중부경제권 - 남부경제권
- 기존계획권역 중 3개 권역의 통합
 - * 수도권 + 충청권 + 강원권
- 1특별시, 2광역시, 1특별자치시, 4도로 구성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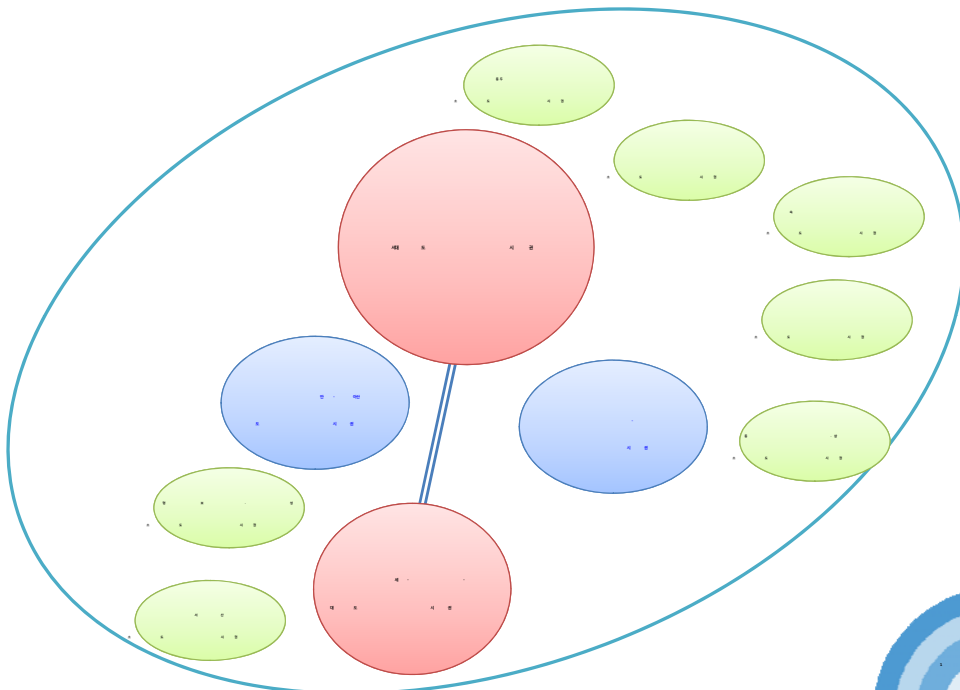


중부경제권의 공간체계

-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 등이 그물망 형태로 상호 연계



- 2 대도시권 → 서울대도시권, 대전-세종-청주 대도시권
- 2 중도시권 → 천안-아산권, 원주-충주권
- 7 소도시권 → 춘천권, 서산권, 포천·동두천권, 보령·홍성권, 강릉권, 동해·삼척권, 속초권





- 인구 50만~100만 미만의 2개 중도시권
 - * 천안·아산권, 원주·충주권
- 중도시권은 지방 중규모 도시권으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
 - * 1핵, 1부핵의 대도시권과 연계 및 주변 소도시권의 중심지 역할
 - * 특화기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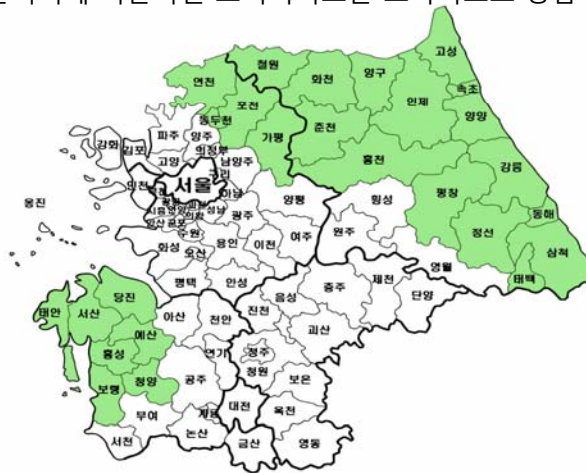


지 권	비	비
천안·아산권	-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지향 * 기초·응용과학 연구 특구 * 디스플레이와 IT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 조성 -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특화산업 육성 * 과학벨트 조성	
원주·충주권	- 의료산업 및 R&D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산업의 연계 사업 추진 *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기반 조성 - 레저스포츠, 의료 휴양관광산업의 연계 모색	





- 인구 50만 이하의 7개 소도시권
 - * 포천동두천권
 - * 춘천권, 속초권, 강릉권, 동해.삼척권
 - * 서산권, 보령.홍성권
- 소도시권들은 낙후지역인 주변 농촌지역들의 생활중심지 역할을 수행
 - * 주변 농촌지역에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



시 권	
포천.동두천권	- 지역의 청정환경, 향토문화, 접경지역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활성화 * 저탄소 녹색관광의 활성화 - 전통 제조업(가구, 섬유)구조고도화 추진 및 슬로우푸드, 평화·안보 클러스터 조성 * 평화산업단지 조성
서산권	- 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 북부축을 중심으로 내륙 및 첨단신산업 복합지대 형성 * 천안아산과 함께 환황해경제권의 생산 및 교역거점,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 *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 지대로 육성
보령.홍성권	- 지방 중추행정 중심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세종시-공주-청양-보령의 중부축을 중심으로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육성 *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및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연안개발 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천권	-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DMZ부근에 지오파크 추진 * 지오파크 인근 지역 평화빌리지 조성 - 레저스포츠 및 관광객 이용시설과 문화관광 축제의 융·복합
강릉권	- 비철금속 클러스터와 탄광지역의 희소금속산업 클러스터의 연계 * 『Global Top Stem material의 거점지대』를 조성 * 풍부한 광물자원과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 특화계획 수립 *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속초권	- 양양공항의 2018년 평창올림픽 지정공항으로서의 역할 증대 * 양양국제공항의 북방진출 거점 공항화 - 해양관광거점 도시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연어를 중심으로 연어산업을 집중 육성 * 계절별 축제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동해.삼척권	- 에너지 소비변화를 반영한 녹색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 수소융합 연구 생산 클러스터 조성 * 석탄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환동해권 해양물류 도시로 발전



III. 중부경제권의 위상 및 역할



중부경제권의 위상

- 중부경제권은 한반도 전체 총생산(GDP)의 약 61%를 차지

* 면적은 20%, 인구는 4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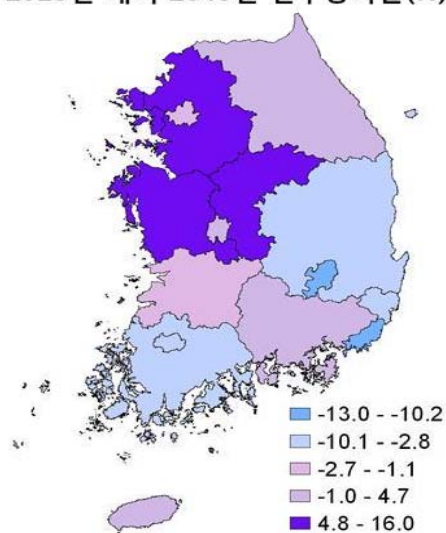
구분	면적 (km ²)	GDP (조원)	인구 (백만명)	한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	72,110,388 (100.0%)	223,350.2 (100.0%)	484.8명	1,172,742,223 (100.0%)
중부경제권	30,349,803 (42.1%)	45,277.6 (20.3%)	670.3명	728,763,554 (60.9%)
남부경제권	17,698,585 (24.5%)	53,086.0 (23.4%)	333.4명	433,509,939 (36.2%)
북부경제권	24,062,000 (33.4%)	123,138.0 (56.3%)	195.4명	24,236,800 (2.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10년 기준

- 향후 인구감소시대 도래에도 불구하고 중부경제권만 유일하게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

* 인구밀도가 670.3명으로 남부경제권의 2배, 북부경제권의 3.4배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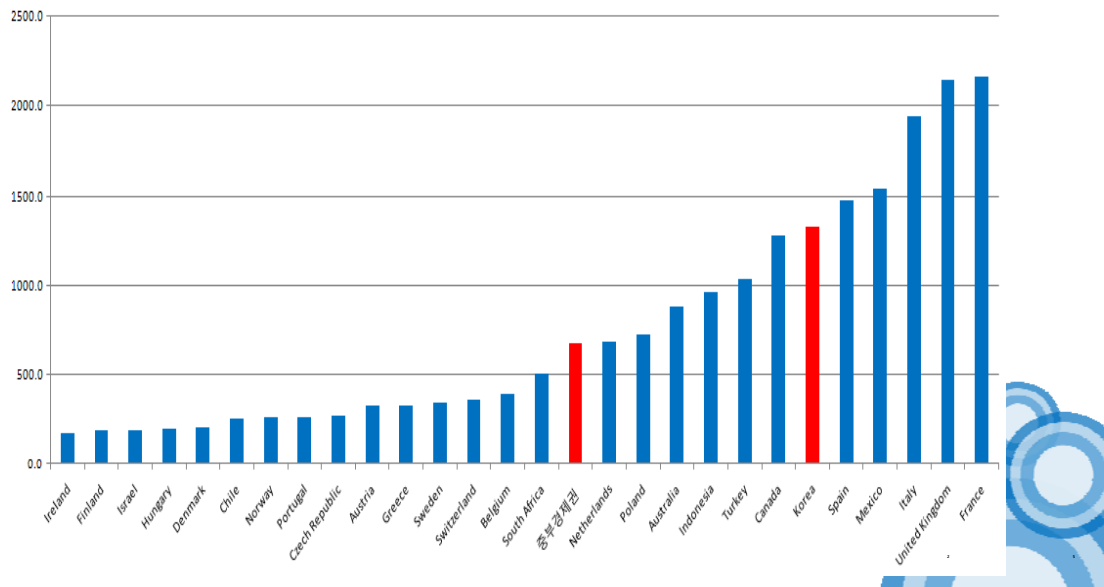
2010년 대비 2040년 인구증가율(%)



자료: 통계청(2012) 2010~2040 인구변화 추계



- 중부경제권의 인구규모는 캐나다와 비슷하며 세계36위권 규모
- 중부경제권의 총GDP규모는 네덜란드와 유사하며 세계 17위권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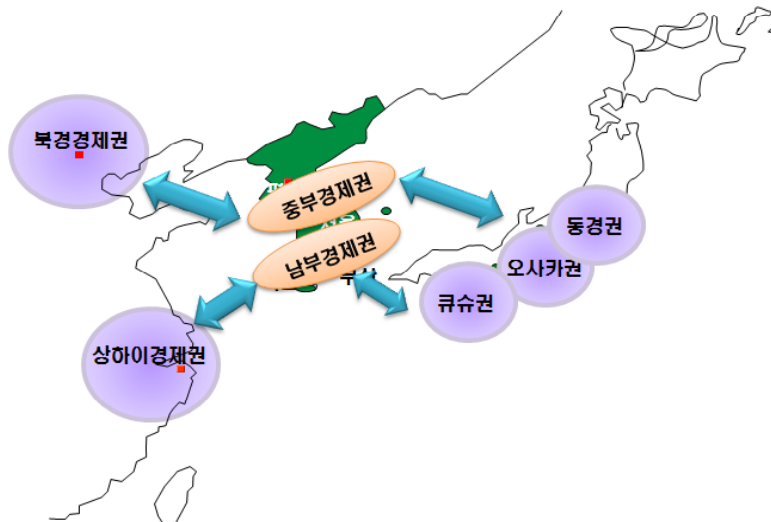


중부경제권의 기능 및 역할

- 중부경제권은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 동북아 거점 및 글로벌 관문 역할을 담당

* 중부경제권은 중국의 북경경제권, 일본의 동경경제권 등과 경쟁

→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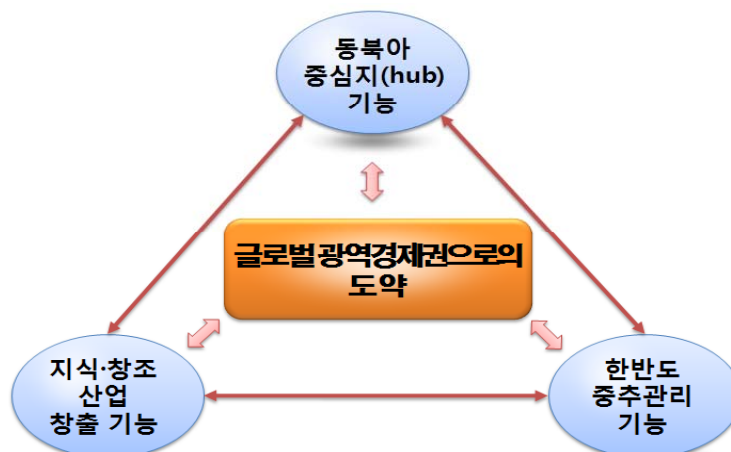
중부경제권의 기능 및 역할

- 세계는 지식.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동 중
 - * 지식.창조경제는 지식에 기반한 창조성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
 - * 2002년 이후 연평균 14% 고속성장
- 중부경제권은 다양한 지식.창조경제의 기반 및 자원을 갖춘 지역
 - *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70% 이상, 전체 투자액의 75%, 전체 특허의 80% 이상
- 중부경제권이 한국의 창조경제를 주도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

	산업경제	정보경제	창조경제
경제위기	오일쇼크 (1970~80년대)	IMF외환위기 (199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성장동력	토지, 노동, 자본	지식, 정보	상상력, 창의성
주력산업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IT산업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	창조산업 (서비스, 예술, 콘텐츠)
성공신화	한강의 기적	IT강국 코리아	Creative 코리아

중부경제권의 기능 및 역할

- 한반도의 정치·행정 중심지 기능
- 대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지원 기능 → '북부경제권'의 형성을 지원
- 지역균형개발 지원 기능 → '남부경제권'의 형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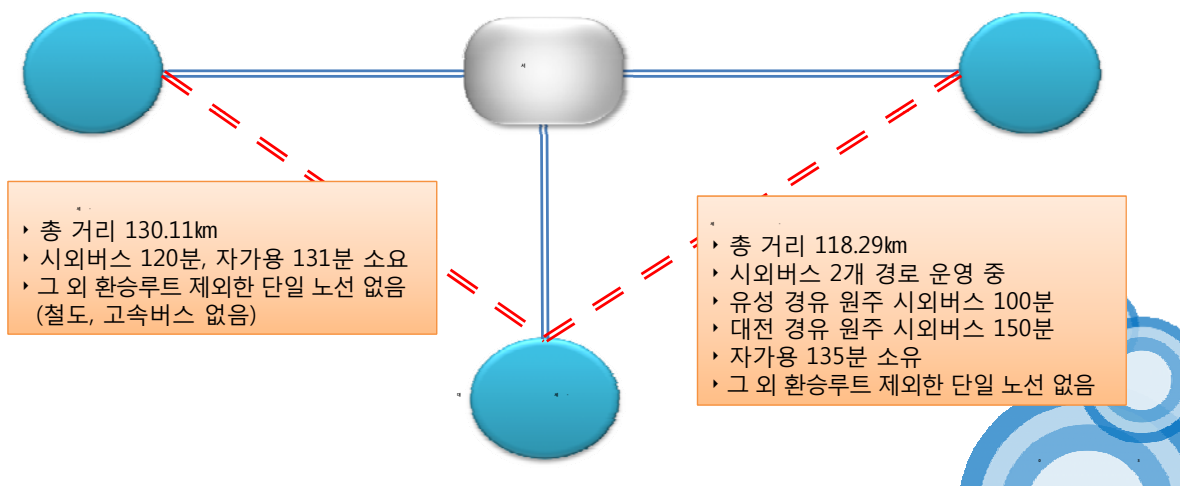


IV. 중부경제권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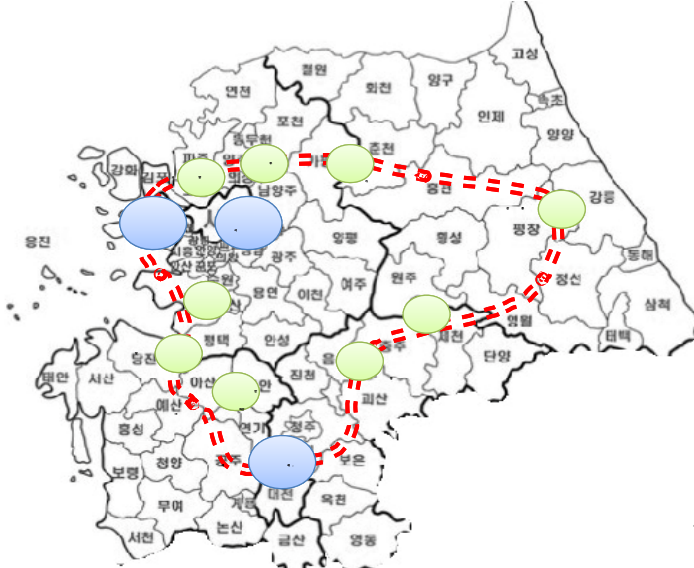
광역인프라정비: 반나절 생활권 구축

- 서울권과의 접근성은 우수
 - * 서울-대전, 서울-원주, 서울-인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로 연계
- 대전·세종권과 인천권 및 강원권간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
 - * 신설보다는 기존 교통망의 연계성 강화 및 확충 또는 고속화



· [가칭] '중부권 외곽순환도로' 의 구축

- 중부경제권의 주요 거점들을 연결하는 '중부권 외곽순환도로'의 연계 구축
 - * 기존 구간의 활용 및 단절구간 도로망의 정비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구축
 - * 중부경제권 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반나절 생활권화
 - * 수도권 제3 외곽도로의 개념 (현재 제2 외곽도로 건설 중)



동북아 중심지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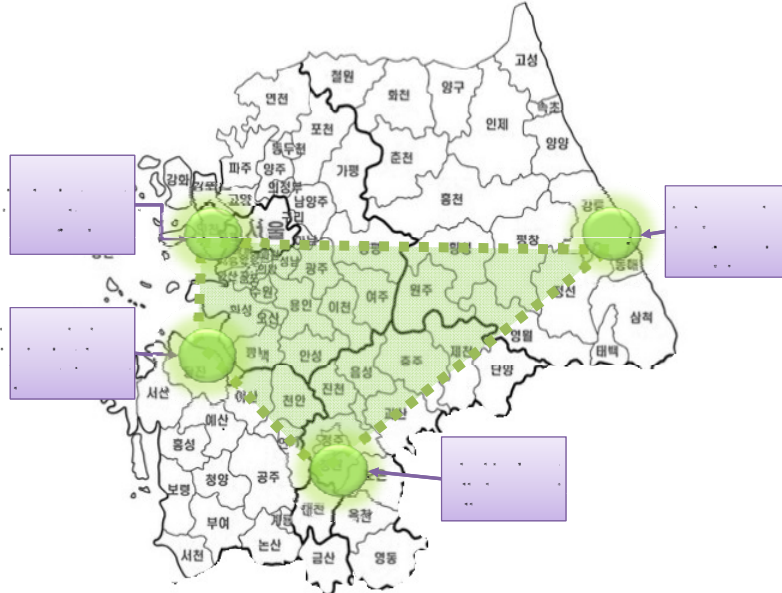
중부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기 지정 경제자유구역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
- 지정 예정 경제자유구역 → 충북(오송)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분	추진기간	면적	사업비	외자유치실적 (목표액)
인천	2003~2020	170km ²	78.0조원	19.3억불(91억불)
황해	2008~2020	16km ²	4.7조원	0.1억불(18억불)
동해안	2012~2023	8.61km ²	1.1조원	-(30억불)
충북	2013~2020	10.77km ²	2.9조원	-(20억불)

- ✓ 특히 4개 경제자유구역의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가칭) '중부권 EFZ 트라이앵글' 구축
- ✓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및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기능 강화



- ✓ 외국기업의 구성원과 인재가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 ✓ 각종 국제컨벤션을 유치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
- ✓ 국내기업의 진입규제를 장기적으로 축소 및 폐지

- ✓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합하고
- ✓ 새로이 신설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유보



지역공항의 기능 분담을 통한 활성화

- 허브공항 → 인천국제공항
- 지역공항 → 김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2004. 11	2006. 11	2012.11*
인원	2,051,652 (명)	2,379,235 (명)	2,814,981 (명)
승객	64,100 (명)	84,943 (명)	120,000 (명)
화물	4,384 (명)	4,394 (명)	32,00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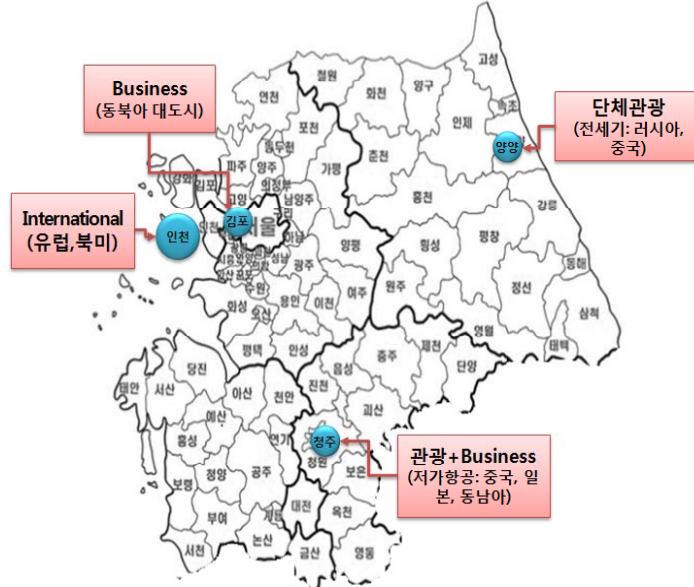
- 2002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여객 추이는 연평균 7.3% 증가
- 김포공항은 국적 항공사 및 외항사의 항공여객 10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 청주공항은 2002년에 비해 250%증가하여 월 이용객수 12만명 기록
- 양양공항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근 활성화에 성공하여 이용객수 3만명 기록

3년 전 9개월간 승객 0→올해 3만 명으로
 몇 년 전만해도 '유령공항' 오명...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강원도, 파격적 유치전략 결실

양양국제공항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영국 BBC방송 보도)으로 불렸던 적이 있다. 2008년 11월 2일부터 이듬해 8월 14일까지 9개월여 동안 단 한 편의 비행기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객은 제로(0)인데 70여명의 공항 직원들만 일하는 풍경을 놓고 사람들은 '유령공항' 같다고 비아냥댔다. 경제성은 도외시한 채 지역정치 논리로 건설한 대표적인 재정낭비 사례로도 꼽혔다.

그러나 2012년 10월 30일, 같은 양양공항에는 입·출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224명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여기저기 중국어 소리로 시끌벅적 해 중국의 한 공항에 온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 공항은 올 10월 현재 국내의 승객 2만 3300여명이 이용했고, 연말까지 총 3만20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김포공항 → 동북아 대도시들간의 비즈니스 셔틀공항
- ✓ 청주공항 → 중국,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저가항공 중심공항
- ✓ 양양공항 → 러시아, 중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기 중심공항



창조경제 선도기능 강화

중부권 R&D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 → 전국 총R&D의 65%를 차지

- * 기업R&D투자의 72%, 대학R&D 연구의 55% 차지
- * 다양한 R&D집적지구 존재
- * 서울: 마곡R&D시티, 상암DMC, 공릉동 서울테크노폴리스, 테헤란밸리, 양재밸리 등
- *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밸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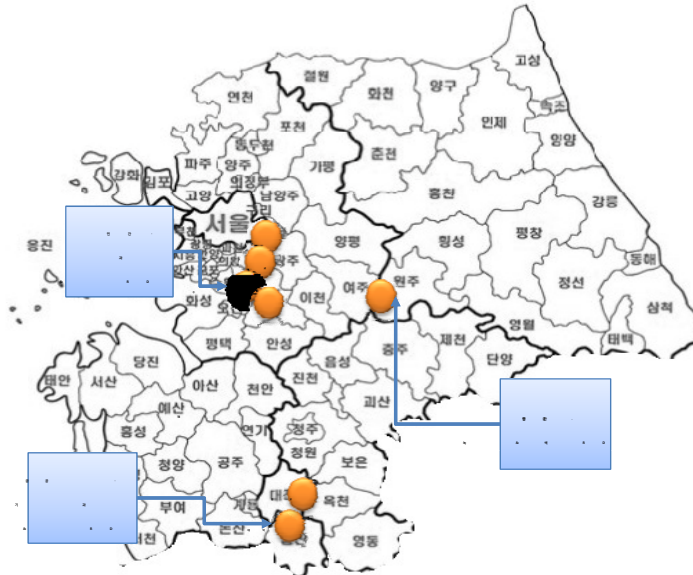
- 대전.세종.충청권 → 국가차원의 기초과학 연구중심지

- *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 오송.오창 과학연구단지 등
- *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16개 이주

- 강원권 → 녹색 R&D 중심지

- * 원주권: 의료기기 및 바이오 R&D

- ✓ 수도권 → 민간주도의 응용과학 R&D에 특화
- ✓ 대전·세종·충청권 → 국가주도의 기초과학 R&D에 특화
- ✓ 강원권 → 민간·공공 협력에 의한 녹색R&D에 특화



- 중부권 소재 대기업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R&D부문의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개발전문기업화 유도
- 연구개발전문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중부권의 기초연구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주도
- 중부권내 중소, 중견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반기술을 연구개발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도록 유도

- 경기도의 경우 "Global Inspira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해외R&D의 국내투자를 독려
- 아일랜드, 인도, 중국 등은 해외R&D센터 유치를 위해 핵심슬로건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중부권 공통의 브랜드이미지 구축이 필요





국제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편리한 입지적 이점으로 인해 국제 컨벤션산업이 빠르게 성장
 - *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 국제협회의연합이 발표한 2011년도 세계 국제회의 개최순위
 - * 한국은 469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점유율 4.6%를 기록하며 세계 6위 기록

	가	2011	2010
1	가	919	725
2		744	936
3		598	741
4		557	686
5		533	597
6		469	464
7		421	499

출처: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UIA) International Meeting Statistics 2011



- 2011년의 경우 수도권(서울)은 232건의 국제회의를 개최
 - * 도시별 순위에서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
- 향후 대전.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제컨벤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충청권(대전)의 경우 2012년 58건을 개최
 - *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 컨벤션산업의 경제성장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컨벤션센터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지식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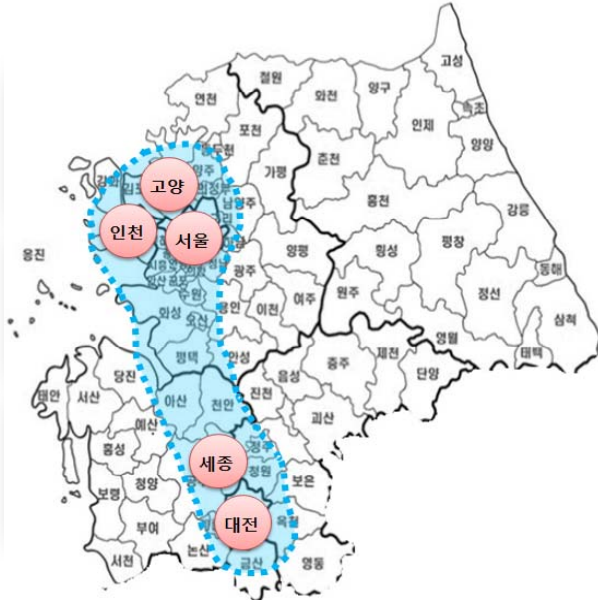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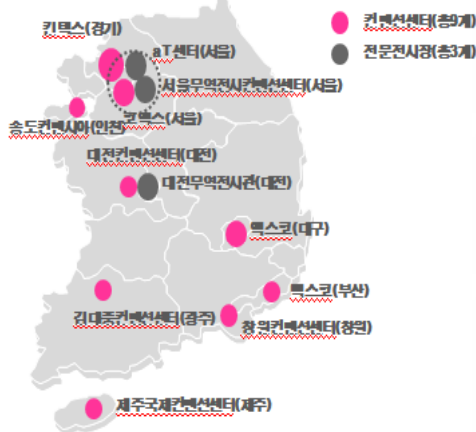


- 수도권 및 충청권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중부권 컨벤션벨트를 집중 육성

* KINTEX, COEX, DCC(대전컨벤션센터), 송도컨벤시아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비즈니스 호텔의 확보,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육성, 인증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

■ 국내 전시·컨벤션 센터 현황



● 한방·양방 통합 의료관광 벨트 조성

-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총 344,407명에 달함

* 한국의 의료기술 발달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도 향상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외국인 환자는 2010년 224,260명에 비해 53.6% 증가

* 전체 의료관광객의 약 90%가 중부권에 집중

- 지금까지는 성형·피부관리를 중심으로 한 양방 의료관광이 다수

* 서울 강남지역이 전체 의료관광객의 약 64% 차지

* 그러나 최근 한방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

* 따라서 한방·양방이 연계된 의료관광을 추진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의료관광에 1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 생산유발효과 1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7억원, 136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가가		
	176억원	80.4억원	237명	136명

출처: 서정교(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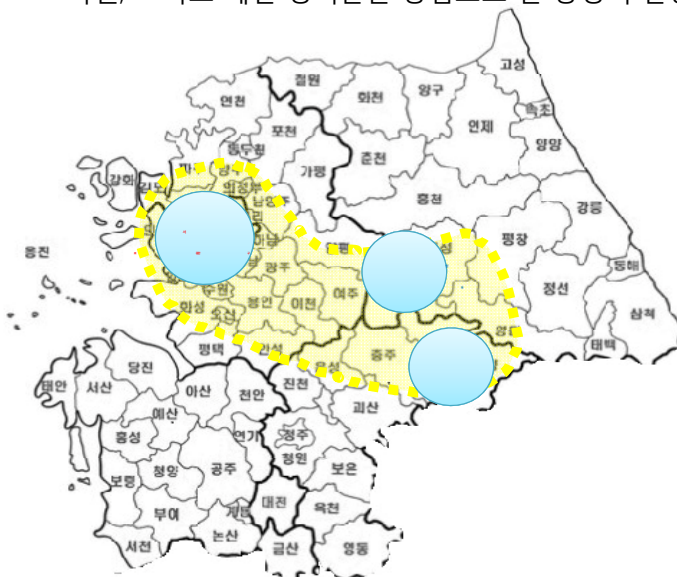
- 1인당 평균진료비는 149만원, 입원환자 진료비는 662만원으로 추산

- 이러한 이유로 싱가폴은 의료관광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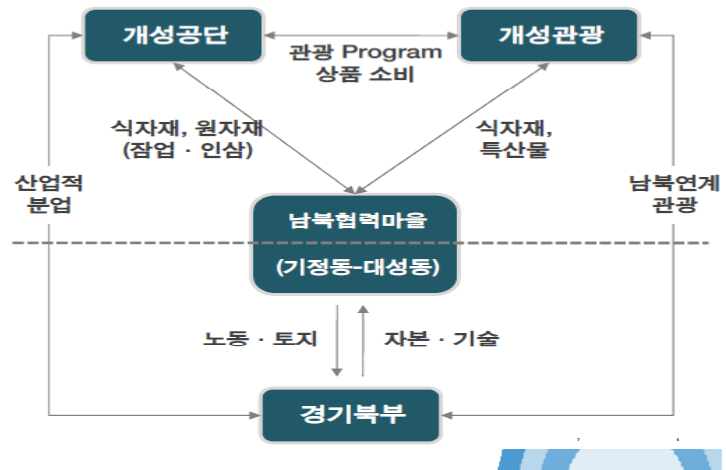


-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의료관광을 연계하여 한국형 Healing 프로그램을 개발 → '통합의료관광벨트' 조성

- 서울의 성형.피부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료시설, 강원도의 치유의 숲 등 휴양형 의료관광 자원, 그리고 제천 명의촌을 중심으로 한 충청의 한방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한 코스



-



-
- 연천-철원-평강 지질공원
- DMZ
- NLL
- 평강군
- 철원군
- 연천군
- 민통선지역
- 양구군
- 하천군
- 경계지역
- 동두천시
- 포천시
- 춘천시



V. 맺는 말



중부경제권은 글로벌 한반도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촉매제

중부경제권은 글로벌 한반도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촉매제

(예)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의 '대도시권국가(Metro Nation)' 전략

新

- * 백악관에 도시정책실(Office of Urban Policy)을 설치
- * 광역대도시권별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구

新

- * 국가전략의 핵심인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등을 대도시권 단위로 계획
- *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대도시권으로 이양

신국립대학대학가대학병원대학병원대학병원





- 중부경제권의 구축은 동남권-호남권을 결합한 이른바 '남부경제권'의 형성을 자극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남한이 크게 2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 (중부경제권 및 남부경제권)으로 재편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 전체가 '북부경제권'이라 명명될 수 있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특화된 3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강력한 '한반도경제권'을 구축하게 됨

* 인구 8,000만 명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경제권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높은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음



THANK YOU

발표③ :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이정식 교수 (前 국토연구원장)



남부경제권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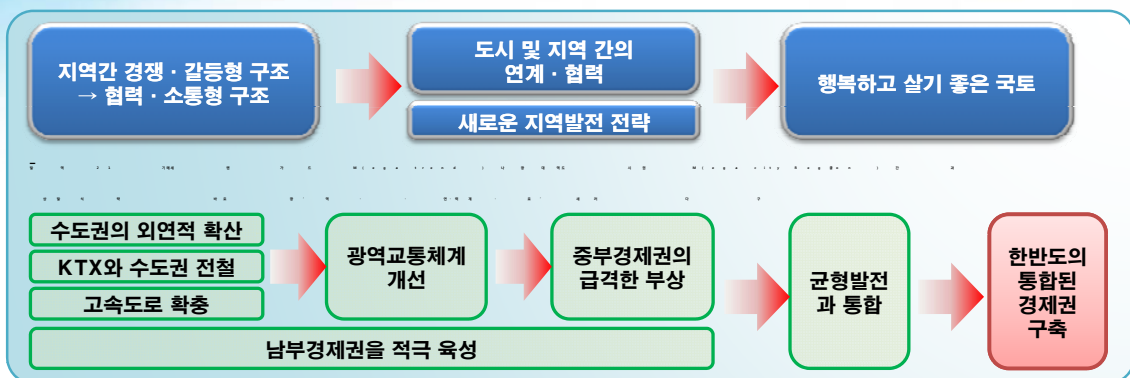
남부경제권

I. 구상의 개요



I. 구상의 개요

1 구상의 배경



2 구상의 내용

- 기존의 물적 계획과 종합계획의 틀을 벗어나 전략계획 차원의 발전전략을 제시
- 공간적 범위 :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포함
- 내용적 범위 :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를 토대로 대·중·소 도시권의 주요 기능과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

II.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II.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



1 광역대도시권의 도래

세계 여러 나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 또는 거대지역(super regions)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의 '지역국가(region states)' Petrella의 '도시지역(city regions)',
Florida 교수의 'Mega-region' 등이 대표적 사례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Mega-city Region 개념의
광역도시권 발전전략을 국토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지역생활권, 지역경제권, 광역권, 광역경제권 등의 계획
지역(planning region) 위주의 공간구분 대신,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 위주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으로 국토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

도시인구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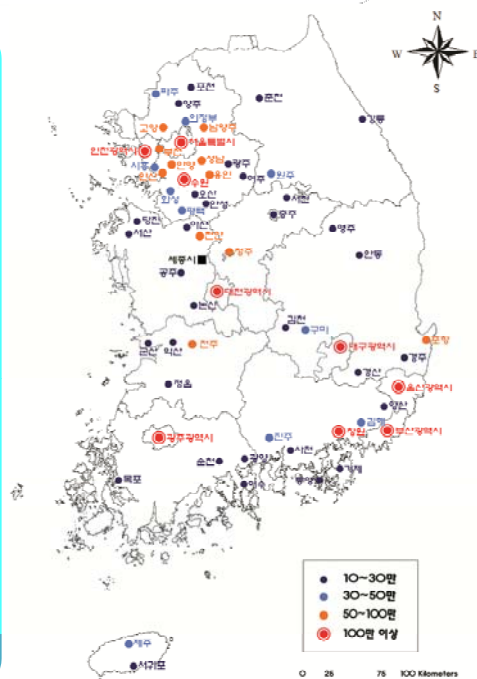
- 市級 도시인구(인구 10만 명) 비율 : 2000년 87% → 2010년 90%
(2030년 경에는 전 국토가 하나의 거대도시권(One Metro-nation)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
- 수도권 인구비중 : 2000년 46.3% → 2010년 49.1%
-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총인구 : 2000년 73% → 2010년 76%

	2000			2005			2010		
			(%)			(%)			(%)
수도권	39	6,679,797	14	41	7,465,090	16	36	6,957,504	14
수도권 외	13	4,559,545	10	12	4,603,299	10	11	4,306,560	9
수도권 외	10	6,766,410	15	10	6,914,030	15	11	7,828,304	17
수도권 외	7	22,249,250	48	8	23,293,442	49	9	24,508,286	50
수도권 외	69	40,255,002	87	71	42,275,861	90	67	43,600,654	90
합계		46,136,101			47,278,951			48,580,293	

2 전국토의 도시화 진행

도시 공간구조의 특성

- 지난 10년간 중소도시보다 인구 50만명 이상
중규모 도시의 성장이 더욱 빠름
- 강원도와 충남 서부, 전북의 동남부, 전남의
중남부, 경북의 중북부, 경남의 서북부 지역
등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도시가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음



3 수도권 외연적 확산과 중부경제권의 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1994)』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입지, 대학, 공공 청사, 대규모 관광단지 등에 대한 차등규제 → 충청권 등으로 개발이 확산
- 수도권 전철의 연장 : 서울~천안·아산은 직접적 생활권
 - KTX 개통 : 서울~대전 반나절 생활권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경기~원주·평창 등의 접근성 제고(서울~강릉·속초 3시간)

- 수도권과 대전·충청·강원 등이 단일 생활권·단일 경제권으로 부상
- 서울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산, 고속교통 수단의 개통과 간선교통망의 개선
 -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청 등을 중부경제권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 중부경제권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남부경제권의 육성이 향후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1)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인구와 경제 연왕(2010)

- 남부경제권의 면적은 53,086km²(전국의 53.1%), 인구는 17,698천명(전국의 36.4%)
- 남부경제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중부경제권의 59.5%에 불과
 - 수출 실적은 남부경제권이 중부경제권보다 약간 높음(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수출 주도형 중공업 분포)

		GRDP(10)		()	
	605	9,794	271,649	273	2,637
	1,029	2,663	56,857	219	354
	540	1,502	26,413	51	274
	10,167	11,379	232,429	1,036	1,709
	16,693	1,472	28,829	43	267
	7,433	1,512	36,233	144	231
	8,630	2,028	76,354	217	295
	45,097(45.1%)	30,350 (62.5%)	728,764 (62.1%)	1,983 (58.0%)	5,767 (66.6%)
	767	3,145	59,531	194	582
	884	2,446	35,632	155	377
	501	1,476	25,140	75	252
	1,059	1,083	59,160	144	173
	8,067	1,777	34,643	99	278
	12,247	1,741	58,750	93	262
	19,028	2,600	78,314	273	384
	10,533	3,160	82,341	390	471
	53,086(53.1%)	17,698 (36.4%)	433,511 (37.0%)	1,427 (41.7%)	2,779 (32.1%)
	1,849 (1.8%)	532 (1.1%)	10,469 (0.9%)	9 (0.3%)	115 (1.3%)
	100,033(100.0%)	48,580 (100.0%)	1,172,742 (100.0%)	3,418 (100.0%)	8,662 (100.0%)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2) 중부 및 남부경제권의 격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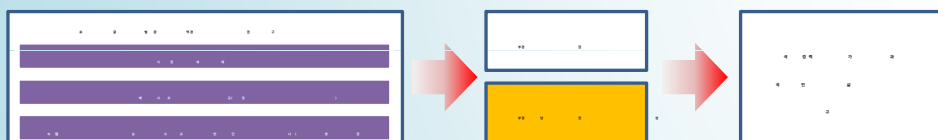
- 중부경제권은 남부경제권에 비해 인구, 지역 내 총생산(GRDP), 서비스업 종사자수 등의 분야에서 집중현상이 지속 (2005~2010년 기준)
- 이러한 격차는 생산자 서비스산업(Producer's Services)의 증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입지 등 경제적 중추기능 뿐만 아니라, 인구와 고급 일자리 등의 쏠림 현상이 향후에도 중부 경제권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GRDP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인구	61.4	62.5	61.6	62.1	59.1	58.0	65.7	66.6
GRDP	37.5	36.4	37.4	37.0	40.6	41.7	33.0	32.1
서비스업 종사자수	1.1	1.1	1.0	0.9	0.3	0.3	1.3	1.3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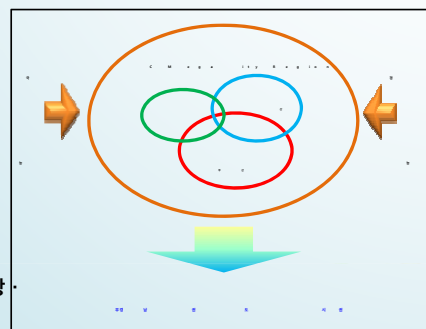
4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3) 남부경제권 육성의 필요성 대두

- 중부경제권과 함께 남부경제권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구축이 시급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Mega-city Region에 해당하는 대도시권에 국제적·경제적 기능과 도시 기능을 강화 →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권으로 육성
 - 대·중·소 도시권 체계를 구축 → 도시 및 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의 성장동력을 확산시켜 남부경제권의 통합 기반을 구축(대구·구미, 광주·나주, 전주·익산·군산, 포항·경주, 광양만, 진주·사천 등 다핵도시권으로 확산)



Ⅲ.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



Ⅲ. 남부경제권의 도시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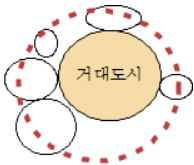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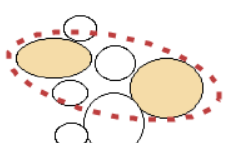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

1) 도시권의 개념 및 유형

 도시권은 중심도시 및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배후지역으로서 통근권 및 경제권, 일상생활권 등을 토대로 한 일체화된 기능지역을 의미

- 학자나 지역정책에 따라 city-region, super-region, mega-region, metropolitan-area 등으로 불림
- 최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의 육성 차원에서 Mega-city Region(MCR)이 자주 인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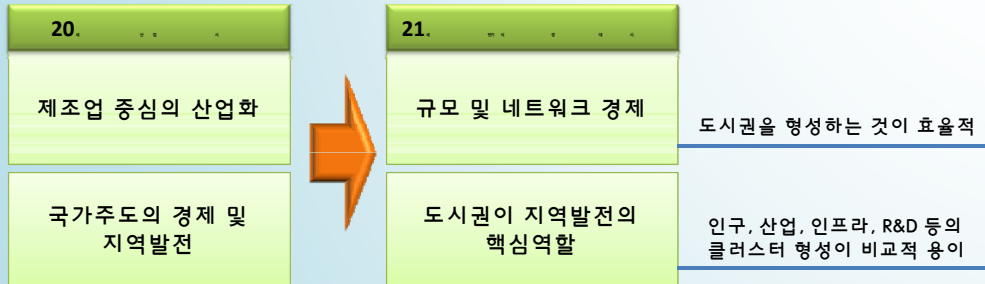
유형1	유형2	유형3
하나의 거대도시가 주변의 배후지역을 경제·정치적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도시권으로 발전한 형태	연담도시 형태의 거대도시 지역으로서 인접한 도시의 배후지역이 공간적으로 중첩 또는 수렴되는 형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접한 중심도시들이 상호 협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혹은 제휴하는 형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네덜란드 Randstad 지역	- 외레순(Øresund)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덴마크 코펜하겐 - 스웨덴 말뫼(Malmö) 초광역권의 초국적 연계형태



1 도시권 구축의 필요성

2) 도시권의 중요성 대두

21세기에는 규모 및 네트워크 경제(Economy of Scale & Network)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별 도시보다는 도시권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이 구상에서는 남부경제권의 다핵도시체계 분석을 토대로 주요 도시권의 기능과 발전 전략을 제시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1) 도시권 설정 사례

도시권의 설정 사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11개의 ‘광역도시권’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권개발계획’에서 10개의 ‘광역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5개의 ‘대도시권’

기존의 도시권 권역설정의 문제점

-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책적 요인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통근·통학, 업무통행, 여가, 쇼핑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함

2) 도시권 설정지표 검토

도시간의 연계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통근·통학률을 중심으로 남부경제권의 도시 체계를 분석

- 통근·통학 관련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0% 표본조사자료(통근·통학)를 이용
-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모도시를 기준으로 주변지역과의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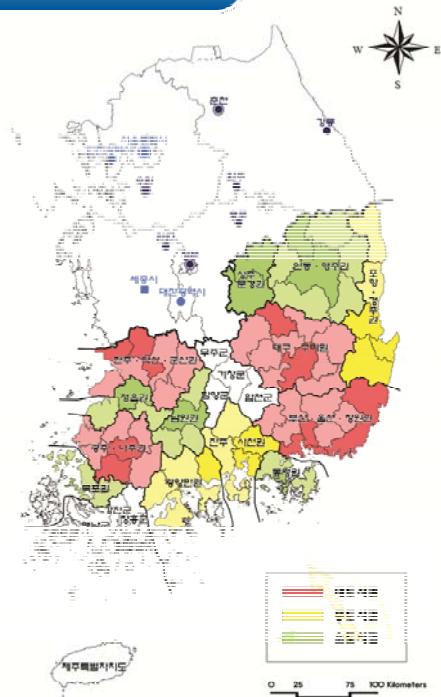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3) 대·중·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대도시권)

대도시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중심도시 또는 연담도시를 대상으로 설정

- 부산·울산·창원, 대구·구미, 광주·나주, 전주·익산·군산 등 4개
- 주요 기능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거점도시권'의 역할과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 기능을 수행

구분	도시명	면적(km ²)	인구(만 명)
대도시권	김해 양산 밀양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6,543	5,760
	경산 김천 영천 청도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3,579	6,610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1,776	3,746
	김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1,469	4,362
	합계	13,367	20,478
전체		17,698	53,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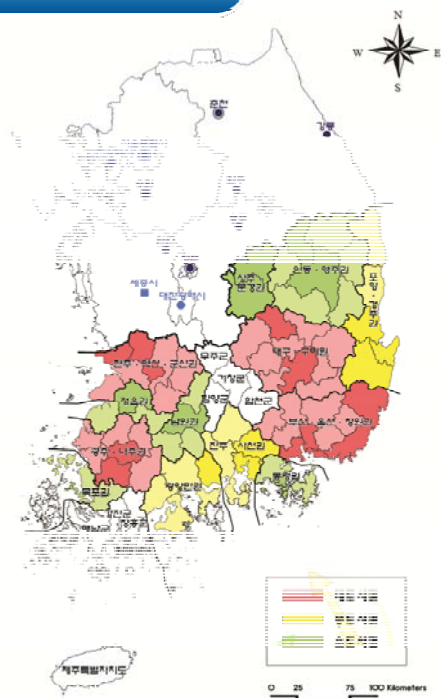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3) 대·중·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중도시권)

중도시권은 인구 30~100만 명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설정

- 포항·경주, 광양만, 진주·사천 등 3개
- 주요 기능은 '성장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되 주변의 대도시권과 연계하여 남부경제권의 경제성장을 견인

구분	도시명	면적(km ²)	인구(만 명)
중도시권	영덕군, 울진군	852	4,184
	여수, 순천, 광양, 보성군, 고흥군	771	3,316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564	2,939
	합계	2,187	10,439
전체		17,698	53,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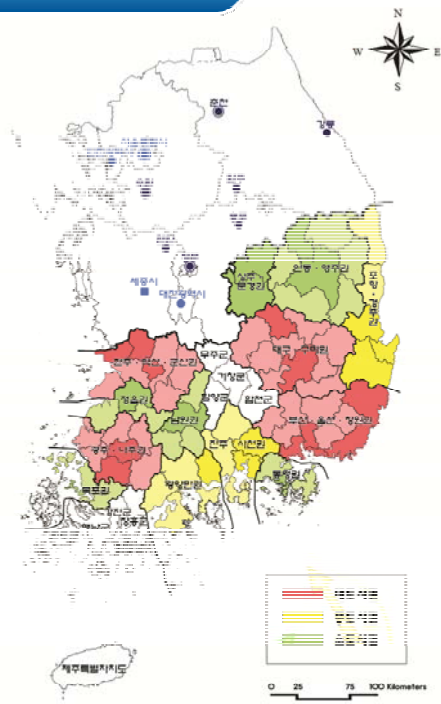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3) 대·중·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소도시권)

- 소도시권**은 인구 10만~30만 명인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설정
 - 안동, 상주, 통영, 정읍, 남원, 목포 등 6개
 - 주요 기능은 성장거점의 역할 및 '자립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자립적 발전과 연계·협력발전을 도모
- 소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규모 10만 명 이하의 소도읍 9개는 별도로 육성(무주, 거창, 함천, 함양,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
 - 각 지역의 향토자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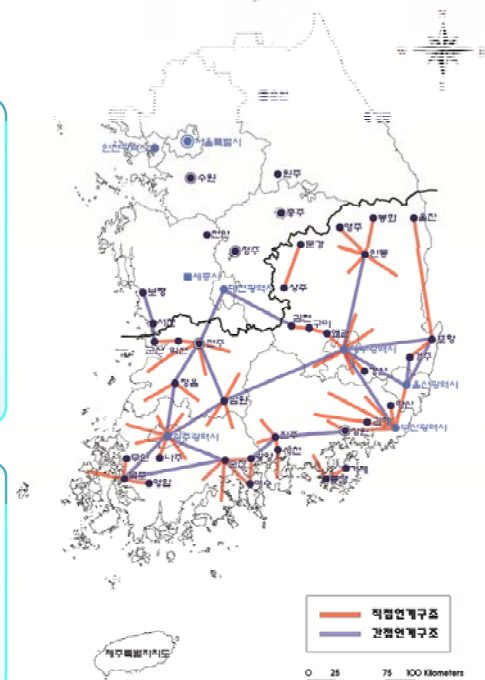
구분		인구(인)	면적(㎢)
소도시권	의성군, 청송군,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441	6,899
	거제, 고성군	412	1,158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410	1,765
	고창군, 순창군	189	1,796
	장수군, 구례군, 곡성군	167	2,167
	소계	1,768	16,062
	거창, 함천, 함양, 무주,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376	6,107
		376	6,107
총계		17,698	53,086



2 다핵도시체계의 구축

4) 다핵도시의 연계 체계

- 도시 간 직접 및 간접 연계구조**
 - 도시권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의 도시 간 연계는 직접적인 동일생활권인 동시에 동일경제권
 - 상호 통근·통학률이 5% 이상인 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도시 간 여객 및 화물통행량 연계 정도와 산업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 간의 간접적 연계 정도를 파악
- 도시 및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 연계·협력사업은 도시 간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대·중·소도시 권 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간접적인 연계성을 가진 타 도시권과의 협력사업도 2차적으로 고려



IV.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IV. 남부경제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1 남부경제권 발전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동북아 및 한반도의 연계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경제권의 중추 거점

- 한반도 남부의 잠재력과 내부역량을 토대로 경제체력을 강화하여 환동해 및 환황해경제권 등 동북아의 국제경제권과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경제권의 창출

2) 기본목표 및 전략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허브 및 차세대 융·복합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국제물류의 전진기지 구축
- 신기술 융·복합 성장동력을 창출

첨단·초고속 광역 및 글로벌 교통네트워크 구축

- 공항 및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국내외 연계 첨단 교통네트워크의 구축
- 중부경제권 및 남부경제권 내의 주요 거점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 기간교통망의 정비

동북아 문화·관광 및 해양·산악휴양의 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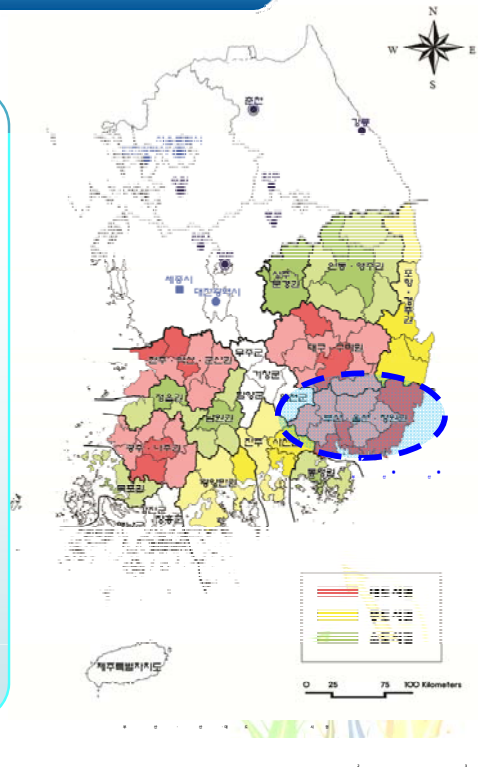
- 역사, 문화, 예술, 자연, 한류 등이 융합된 동북아 관광 및 휴양의 허브 구축
- 바다와 산악, 하천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해양관광 및 산악 휴양의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2 대도시권 발전전략1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동북아 해양 비즈니스 및 남부경제권의 경제首都 기능 확충	- 부산 신항의 국제물류지원단지, 항만 비즈니스 센터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거점기능을 강화 - 국가기간산업 및 해양관련 산업, 선박금융, MICE 산업, 과학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국내외 기업 유치, 삶의 질 제고 등을 통해 한국 제2의 首都 기능을 강화
선도전략산업 및 신성장 지식기반산업의 기능 강화	- 수송기계산업, 해양플랜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IT기술과 접목시켜 IT융합 기계기술산업으로 육성 -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 - 문화·관광, 휴양, 의료산업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기능을 강화
해양관련 융·복합 R&D 지원과 인재양성	- 부산대도시권에 R&D특구를 지정하여 해양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제고 - 기업친화형 인적 자원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기회의 확대를 도모



2 대도시권 발전전략1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

2) 추진전략

신해양 비즈니스 관련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 항만물류 및 금융 등 관련 서비스산업 동반 육성(부산항 신항, 해양비즈니스벨트) - 유라시아의 관문 기능 제고 및 동북아의 오일허브(Oil Hub) 구축(울산) - 일본 규슈권과 초국경 경제협력 강화(부산-후쿠오카 자동차산업 등)
광역 산업클러스터 및 신성장 선도형 산업기반의 구축	- 동남해안 국가기간산업의 클러스터 구축(남부경제권의 핵심 산업경제권) -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조선 및 해양플랜트 수리기지) - IT융합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융합부품소재,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산업 + IT)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고급두뇌의 지역 정착 유도	- 미래의 해양관련 융·복합 R&D 지원(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R&D특구) - 기업친화형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산·학·연 협력 및 기업대학) - 중소 및 중견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의 적극 창출
융·복합 해양문화·관광산업의 특화 육성	- 동북아 문화·관광의 허브 구축(해양·산악·하천, 문화·관광자원 발굴) - 장소판촉을 통한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의 집중 유치
글로벌 및 광역 교통네트워크 구축	- 남부경제권의 신공항 건설 검토 - 광역 교통인프라의 구축(순천~광주 송정 복선 전철화)

2 대도시권 발전전략2

(대구·구미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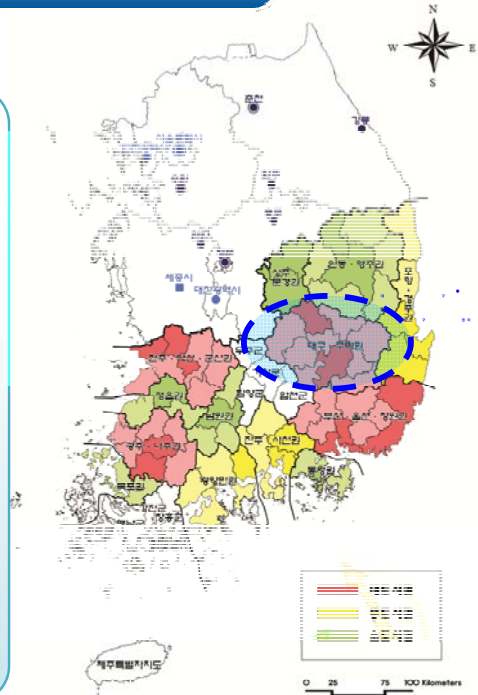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지식경제기반 글로벌 산업기능의 강화

- 대구의 솔라시티와 경북의 에너지클러스터 등을 연계하여 신성장 그린 에너지산업 육성기반을 구축
- 주력산업 분야의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현장밀착형 IT융합산업벨트 구축

지식클러스터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기능 확대

-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구미·청도의 교육관련 특구 등 교육·학술자원을 연계하여 학술진흥, 교육서비스 및 기업지원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학습고용 인턴십 매칭, 특화된 청년학습고용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2 대도시권 발전전략2

(대구·구미 대도시권)

2) 추진전략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글로벌 그린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고급 일자리의 창출을 도모
- IT융·복합 산업벨트의 구축 및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의료, 에너지, 자동차부품산업)
- 선도전략산업 및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대구 메카트로닉스, 첨단금속, 생물/섬유산업 등)

교육·학술자원을 활용한 지식클러스터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교육·학술 비즈니스벨트의 기업지원 R&D 서비스 제공(대학별 특성화, 학술 및 R&D지원)
- 교육특구의 인적자원 개발 및 문화·예술인력의 양성(대구, 구미, 청도 연계)
- 대구와 울산의 산업 및 인력교류 등 경제적 연계 강화(도시간 전문인력 공급 및 R&D 협력)

글로벌 및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 남부경제권의 신공항 건설 검토
-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대구 도시철도 연장노선, 광역통근 철도망 조기 완공)

2 대도시권 발전전략3

(광주·나주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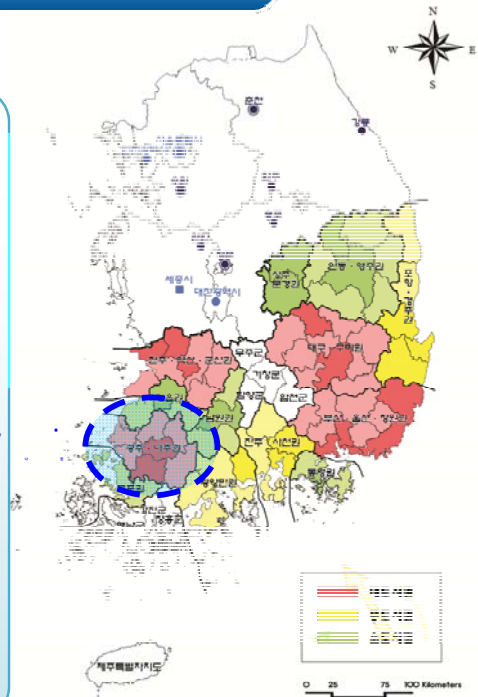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光융합 기반산업 등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기능 확충

- 光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등을 토대로 光기술기반 융합부품산업, 스마트 케어 가전(家電), 차세대 전지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화순의 백신산업특구와 국립심혈관센터 및 장성의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아시아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기능 강화

- 광주비엔날레 등의 각종 축제를 기반으로 국제문화 교류를 활성화시켜 아시아의 문화 및 예술관광 거점으로 육성
- 남도음식, 고싸움 등 다양한 유형의 테마파크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의 차별화를 도모
- 영산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생태체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특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2) 추진전략

과학기술 및 연구역량의 강화로 미래산업의 진흥과 일자리 창출

- 광주~광양만~목포의 삼각 연계 협력 강화(광주~광양만: 전통·기간산업축, 광주~목포: 에너지 산업축, 목포~광양만: 해양관광벨트축)
- 光융·복합 산업의 R&D 강화 및 상용화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 및 에너지 산업의 육성(콘텐츠 개발, 미래문화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문화·예술융합기능의 확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육성(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문화·관광상품 개발)
- 문화·관광의 차별화 및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곡성,지리산,담양등)
- 영산강 생태·역사문화 관광거점의 조성(광주, 나주, 영암의 문화유적 전승 및 관광휴양시설)

글로벌 및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 국제항공 연계기능의 확충(광주~인천 노선 개설)
- 광역교통 인프라의 구축(88올림픽고속도로의 조기 확장)

2 대도시권 발전전략4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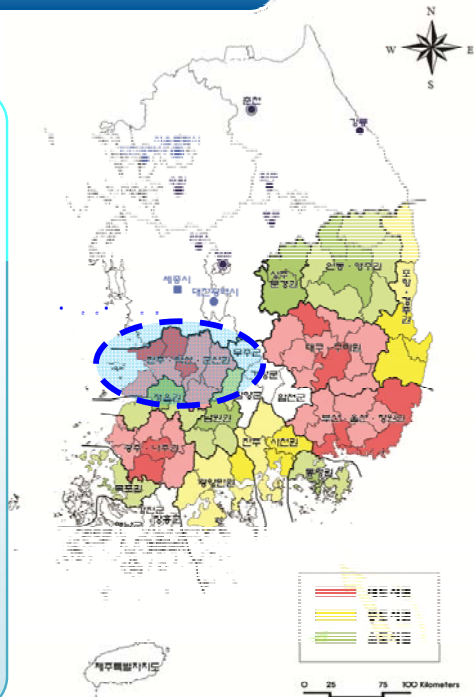
1) 주요 기능 및 발전방향

서해안 중부지역의
국가발전전략기지 역할 분담

- 전북 북부~충남 서부~경기 남부의 서해안을 연결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서부 벨트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기지로 육성
- 서부 벨트의 신재생에너지, 차세대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주력산업과 IT산업 간의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식품산업의 전략적 허브 기능
강화 및 첨단부품소재 R&D
기능 확충

- 익산의 국가식품산업단지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을 중심으로 식품 및 농생명 산업의 R&D 강화와 특성화를 추진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식량비축기지를 건설하여 식량 및 식품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조절에 대비하고, 미래식량의 원천기술을 개발
- 신재생에너지, 탄소섬유, 방사선융합기술(RFT) 등의 기술개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 대학교의 관련 R&D 역량 제고



2 대도시권 발전전략4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2) 추진전략

서부 벨트의 신성장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전주의 탄소·자동차·기계, 군산의 선박·자동차, 익산의 보석 등, 탄소복합재 시험·인증센터 설립)
- 전주와 대전 및 대덕연구단지의 R&D 클러스터와 기능적 연계 강화(연구인력 및 산업연계 협력)

국가식품 및 농생명 산업의
전략적 허브 구축

- 식품 및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R&D 협력,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
- 국가식량비축기지과 씨드밸리(Seed Valley) 사업의 연계
- 전통예술·문화의 창달과 지덕권(智德圈)의 휴양·힐링산업 진흥

새만금 사업과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 1단계 새만금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방수제(防水堤), 새만금 내부 성토(盛土) 사업 등)
-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

3 중도시권 발전전략1

(포항·경주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포항-경주-울산의 트라이앵글 산업경제권 구축

- 원천기술기반, 자동차,조선,신소재·부품 산업

철강산업의 다변화 및 국책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포항의 철강산업과 첨단신소재의 융·복합화
- 경주의 방폐장과 한수원 이전, 양성자 가속기 유치 등
3대 국책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된 문화·관광도시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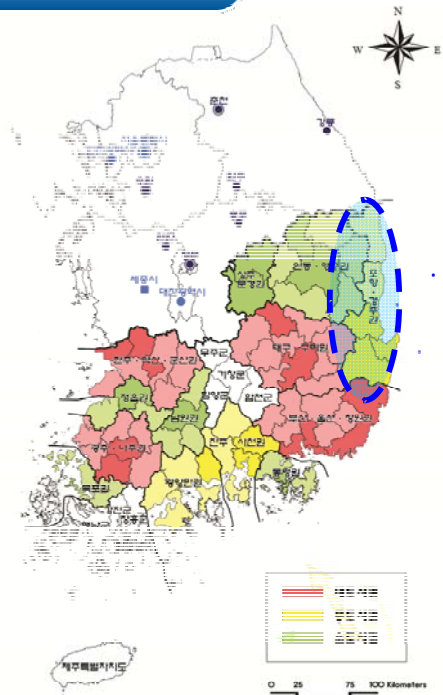
- 경주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되는 살기좋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 울진은 포항의 POSTECH 해양대학원 설립,
한동해해양과학관 유치로 해양과학도시로 육성

동해안 융·복합 관광·휴양벨트의 구축

- 경주(신라문화와 숙박)-포항(산업과 해양레저)-
영덕(유교문화와 대게)-울산(산업과 금강송, 보양온천,
해양레포츠)-울릉(녹색 섬 문화와 독도) 등
해양관광·휴양지대를 조성

향토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 포항 과메기, 영덕 황금은어, 영덕게장 및 성게, 울진
대게와 홍게 등 지역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중도시권 발전전략2

(광양안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기간산업 및 물류·교역 중심도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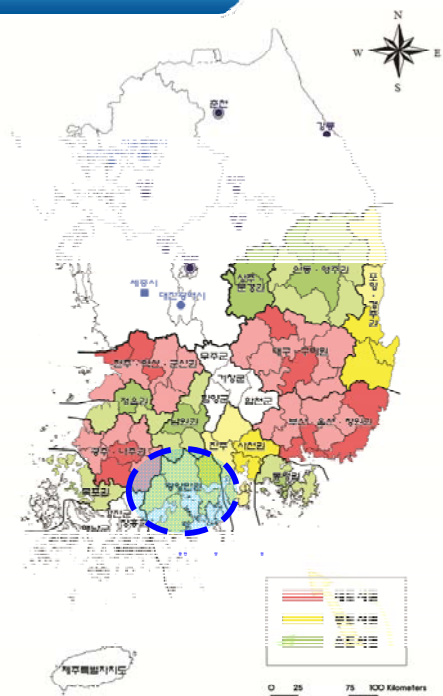
- 여천 및 울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을 중심으로 이미
집적된 석유화학, 제철 및 기계산업 등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광양컨테이너항과 광양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철강·항만·조선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육성
- 순천의 고강도 경량 자전거산업 등 특화된 신소재
산업을 육성

남해안 중부의 관광거점 및 생태문화·관광산 업 육성

- 섬진강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와 한려수도가 교차하는
문화예술지대를 조성하여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개발
-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마리나와 크루즈항 등 고급 해양레저관광기반을 구축
- 순천만에 세계정원과 수목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생태문화관광지로 조성

농특산물 및 전략산업 육성

- 광양의 매실, 보성의 녹차, 구례의 친환경 우리밀,
고흥의 유자·석류·참다래 등의 전략품목을 융·복합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촉진



3 중도시권 발전전략3

(진주·사천 중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항공·소재산업 및 조선산업의 육성

- 사천과 진주를 항공산업기술 및 핵심부품 생산기지로 육성(항공 우주산업도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항공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산업밀착형 항공부품 생산요소기술 연구거점을 구축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인 갈사만에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조선기자재 등의 생산을 추진

수변·해양관광산업 및 수산업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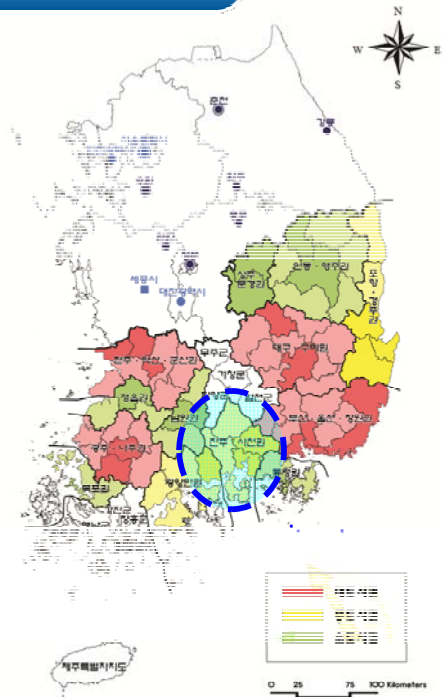
- 진주는 남강, 진양호 등의 워터프런트와 가좌천, 나불천 등의 수변문화·관광산업을 육성
- 하동에 통영 미륵산과 해남 땅끝마을을 연계하는 남해안 중부의 관광명소로 육성
- 사천의 실안 관광지 조성, 삼천포항의 「어항구」 지정(수산업 육성)

실크산업 및 스포츠 경관산업의 육성

- 진주를 실크산업 중심지로 육성(실크전문단지, 실크패션 디자인센터 및 신소재 개발센터 건립)
- 남해에 잔디생산단지, 잔디테마공원과 잔디사파리 조성

한의학의 산업화 및 한방산업의 육성

- 산청 한방 콤플렉스 조성(약초식물원, 한방 휴·요양촌, 한방 치유형 펜션단지, 한방전문 치유센터)



4 소도시권 발전전략1

(안동·영주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 및 생물·한방산업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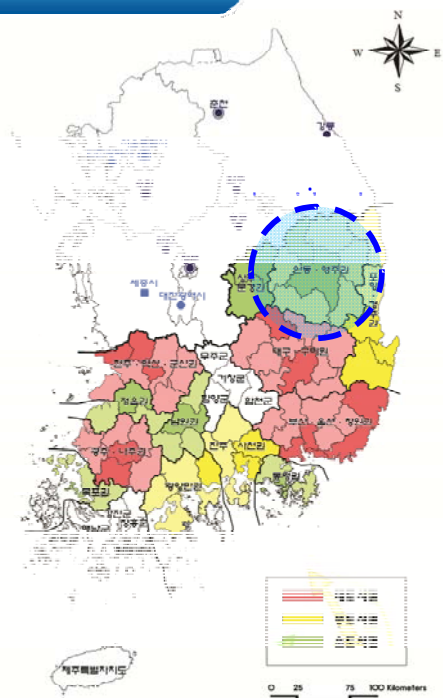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계획인구 10만 명)에 행정, 교육, 문화, 유통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 재배, 가공, 유통 등 약용작물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한방자원을 활용한 요양, 레저, 치료 등이 가능한 천연물기반 코스메틱/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

유교문화의 창달과 백두대간의 생태공원 조성

- 안동에 국립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유교관련 문화관광중심지로 육성
- 영주의 산림테라피단지와 봉화군의 봉화수목원 등을 연계하여 산림바이오 테크노파크를 조성
- 예천의 산업군충과 청정자원을 자원화하여 백두대간 근충생태공원을 조성

휴양산업 육성 및 향토자원의 연계·협력개발

- 청송의 주왕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휴양산업을 적극 개발
- 영양의 고추, 사과 등 지역특산품의 농산물 생산·유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을 강화



4 소도시권 발전전략2

(통영 소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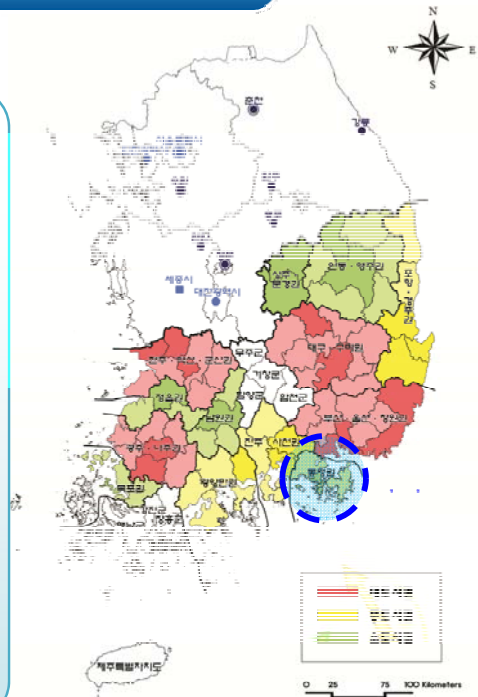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조선산업의 중추도시 육성

- 해양 설계 분야, 해양자재의 국산화 및 관련 기업체의 동반 성장을 통해 거제를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중추도시로 육성
- 고성의 '조선산업특구'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대형선박을 건조

신성장 관광산업의 육성

- 통영에 미륵도 관광특구 및 한산도 역사관광자원을 남해안의 주요 관광지로 개발하고, 용남지구에 요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고성에 당항포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4 소도시권 발전전략3

(목포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신성장 동력산업 및 조선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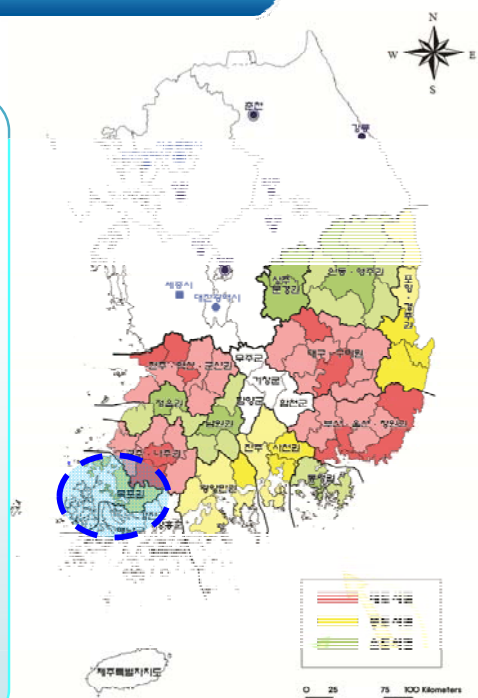
- 목포의 파인세라믹 산업과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형 조선산업을 육성
- 목포와 영암의 관련대학을 중심으로 조선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

다도해 관광산업 육성 및 남도예술의 창달

- 목포항의 다도해 유람선 운항사업을 활성화하고, 목포와 신안에 요트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양관광 중심도시의 기반을 구축
- 남도예술의 창달 기반을 강화
- 무안은 회산백련지(白蓮池)를 체험·휴양형 관광지로 개발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영암 무화과의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신안 천일염 산업의 생산·가공·마케팅 등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4 소도시권 발전전략4

(정읍 소도시권)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방사선융합 기반기술의 구축 및 산업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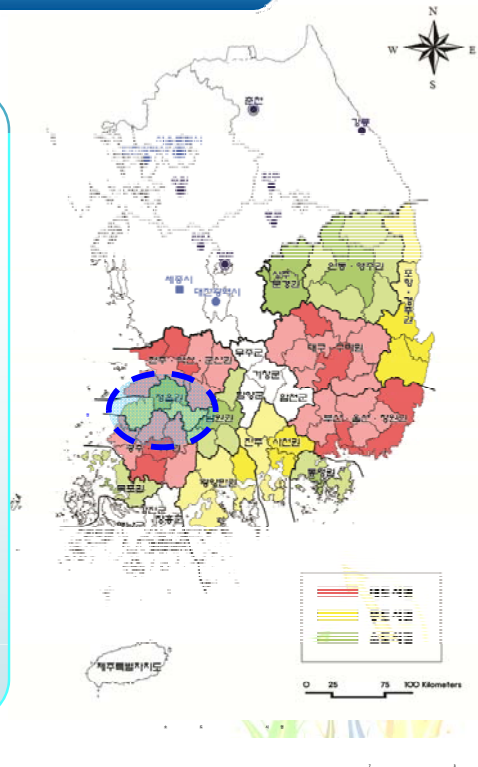
- 정읍의 방사선과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과 연계한 방사선융합기술(RFT) 벨트를 조성하여 관련 R&D기반 구축
- RFT기술과 식품 및 농생명 관련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융·복합 산업 기반을 강화

역사·예술문화 및 해양관광자원의 연계 협력개발

- 정읍의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동학농민혁명 역사관광지역 등을 연계하여 역사·예술문화 관광산업으로 특화 발전
- 정읍의 산악 관광자원, 고창의 해양스포츠 관광과 갯벌생태자원,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해양레저 관광 등을 연계하여 사계절 특화관광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정읍의 한우, 찹쌀 등 축산물의 현지가공 및 고창의 복분자 산업, 부안의 누에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여 농가소득의 증대 도모



4 소도시권 발전전략5

(상주·문경 소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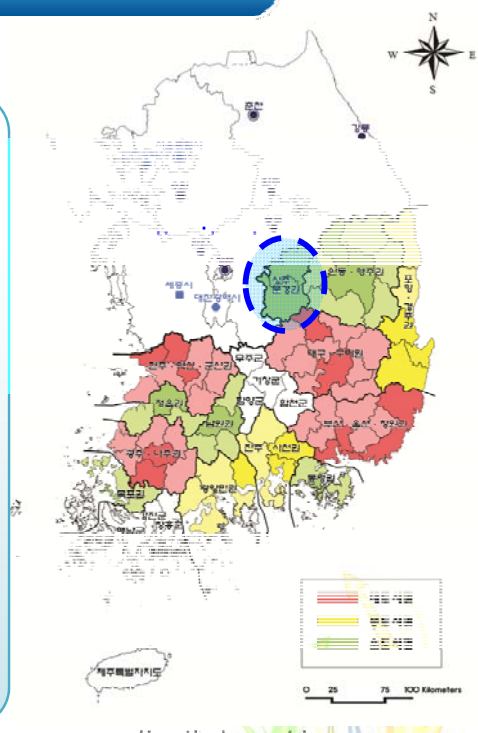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문화체육 및 생태관광의 활성화

- 상주에 낙동강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체육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문경에 문경새재 테마파크,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문경고려촌 등을 조성하여 중부내륙의 생태관광 및 스포츠 도시로 육성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상주의 곱감, 오이, 양봉, 육계 등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확충
- 문경의 오미자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명품화 기반 구축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내발적 발전기반 조성



4 소도시권 발전전략6

(남원 소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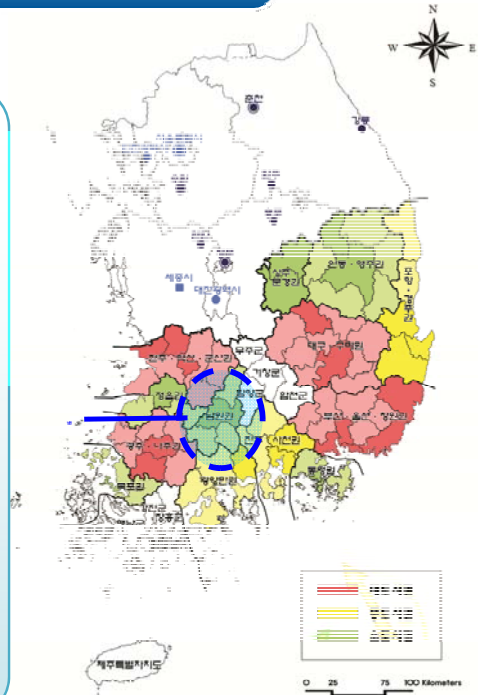
1)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관광산업의 특화 및 차별화 추진

- 남원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연수관광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
- 남원 일대의 향토자원인 허브산업과 관련된 허브클러스터의 육성
- 장수의 논개 생가지 및 논개사당과 승마체험장을 중심으로 한 말(馬)산업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특화발전 추진

지리산 주변의 연계 협력 개발 및 전통 식품산업의 육성

- 장수는 내륙의 교통요지인 이점을 활용하여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등 지리산 주변의 3개도 7개 시·군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
- 순창은 '장류특구'를 기반으로 장류의 6차 산업화로 전통 식품산업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추진



5 소도읍 발전전략

전라북도

- 무주: 고산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산업인 천마(天麻)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청정환경을 중심으로 관광휴양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전라남도

- 장흥: '생약초·한우특구'를 중심으로 한방약초 특성화 단지 조성
- 강진: '고려청자 문화특구'를 중심으로 도예촌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 완도: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충무공 이순신,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 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활성화, 전복의 명품화 사업
- 진도: 다도해의 특색을 살린 테마섬 개발과 진돗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관광상품화 추진
- 해남: 전국적 브랜드인 '땅굴'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 향토산업인 고구마, 겨울배추, 세발나물, 맥주 보리 등을 활용한 가공·유통산업기반 구축

경상남도

- 거창: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특화산업으로 육성
- 함양: 게르마늄 산삼의 산업화, 함양곶감 특성화, 산양산, 백연, 하고초, 자미고구마 등 향토자원의 기능성 식품개발과 6차 산업화를 추진
- 함천: 가야산(해인사), 황매산(함천호), 영상테마파크, 황강 주변 종합개발 등 내륙관광 인프라의 구축, 향토한우 클러스터의 중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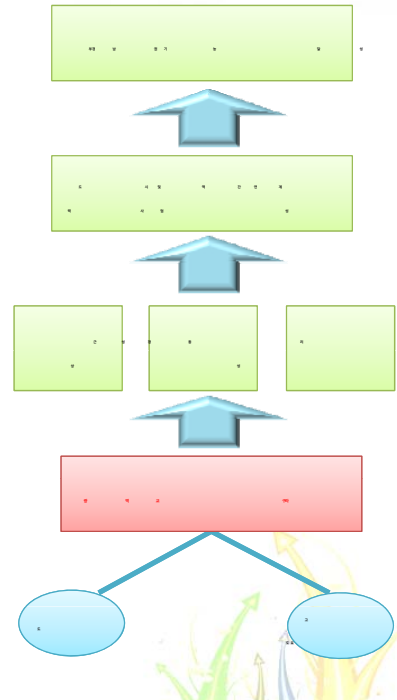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

1) 광역교통 인프라의 연계 구축

- ▶ 남부경제권 내의 도시 및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적 통합을 위해서는 주요 도시 및 경제활동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의 우선적인 구축을 추진**
- 광주~남원~함양~고령~대구 간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 광주·나주, 대구·구미 및 전주·익산·군산(남원 경유) 대도시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기능적 연계 및 통합을 도모
 - 경전선 철도(삼랑진~진주~순천~보성~광주 송정) 구간 중 순천~보성~화순~광주 송정 구간 : 복선 전철화를 조기에 완공하여 남부지역 도시권 간의 연계 통합을 촉진

- ▶ 도시권 내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부산외곽순환도로 : 조기에 완공하여 부산과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 김천~구미~대구~경산~청도~밀양을 연결하는 광역통근 철도망 : 지역 경제 활동의 원활화를 지원
 - 새만금 신항~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촉진 시킴으로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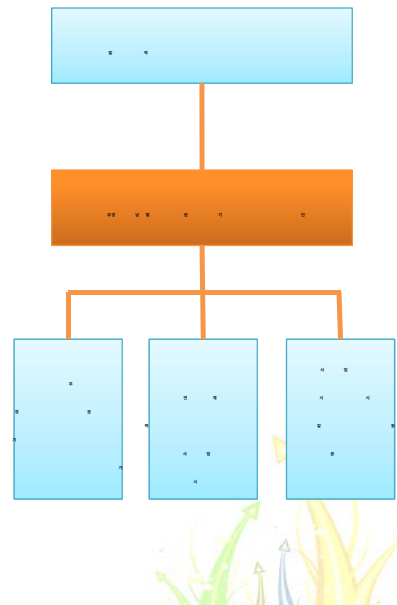


6 남부경제권의 통합전략

2) 광역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 ▶ ‘남부경제권 교통정책본부’ 설립**
- 남부경제권 내의 연계 및 통합을 촉진시키고, 광역교통 인프라의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립이 필요

- ▶ ‘남부경제권 발전기획단’ 설립**
- 남부경제권의 통합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관련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추진 기구로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기구 설립이 필요
 - 이와 별도로 프랑스의 DIACT(과거의 DATAR를 확대 개편)처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계획계약(Plan Contract)’과 같은 정책수단에 의한 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V.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



V. 실천방안 및 정책건의사항



1 실천방안

1) 광역도시계획체계의 정립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의 의무화

- 대·중·소 도시권별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으로 통합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

계획기간의 조정

-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년으로 규정 → 계획의 신뢰성 저하
-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을 각각 10년과 8년으로 조정하되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각각 5년과 4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 시행계획으로 연결되는 3단계의 계획체계를 정립
- 공간계획체계의 단순화와 계획의 집행력을 제고

관련 법률의 개정

-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



1 실천방안

2) 지역 간 연계 · 협력사업의 촉진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정지원

-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협의, 조정, 합의도출, 사업화 등에 긴 절차와 시간 소요 → 사업의 상시적 발굴과 지원이 필요
- 연계 · 협력사업은 ‘광역 · 특화 · 자율 · 협력’의 원칙을 지향하면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채택되 선정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계 · 협력사업의 경쟁을 유도
- 연계 · 협력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광특회계에 연계 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지역 연계 협력기금을 설치 · 운영하는 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관련부처의 협력 및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 · 협력사업의 발굴, 행 · 재정적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연계 ·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세출예산 차등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 ·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



1 실천방안

3)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 확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의 효과를 평가하여 규제특례의 부작용이 적고,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규제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 특히 규제특례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 『농지법』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의 효과를 적극 검토

지방정부의 계획고권(計劃高權)과 도시관리의 자율성 확대

- 도시용 토지의 공급과잉과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발허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도시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 추진
- 영국은 『분권화 및 지방화에 관한 법률』의 입안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계획 권한과 책임의 강화를 강조



2 정책건의사항

1) 지역개발관련 법령의 통폐합 및 단순화

국토의 난개발 및 過開發 방지

- 현재 각종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은 모두 39개에 달하고 있음
- 이들 법률에 의해 지정된 각종 지역·지구 수는 55개, 총 지정면적은 127,808km²로 남한 면적의 1.3배에 달하나 사업지구 면적은 0.4%에 불과하여 국토의 난개발과 과개발을 초래

관련 법률의 통합정비

- 국토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등을 우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2011. 9)
-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특정산업육성에 관련된 법률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도시개발에 관련된 법률의 통합뿐만 아니라 지경부, 행안부, 농림부, 문체부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관련 법률도 대폭 통폐합하여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건의사항

2)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

선도산업 육성의 성과

-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은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 에너지, LED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해 왔음
- 선도산업의 육성을 통해 1단계 사업(2009.7~2011.11)에서는 총 14,401명의 고용창출과 7조2,421억 원의 매출, 33.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

선도산업 육성의 한계

- 문제점은 지원프로그램의 복잡 및 지원대상의 중첩, 산·학·연 협력의 미흡,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 신성장 동력 산업 위주의 지원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선도산업의 육성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산업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동성과 지역산업 육성여건의 악화를 초래

지역산업의 특화 및 일자리 창출

- 시·도별 또는 대·중·소 도시권별로 산업집적도, 특화도,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주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역의 기업유치정책을 적극 지원
-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도금, 소성가공, 용접 등 제조업기반 뿌리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산업으로 육성
- 고용효과가 매우 큰 의류·봉제, 신발, 인쇄, 귀금속·보석, 안경, 가방, 도자기, 가구, 악기, 점토, 치기공(齒機工) 등의 도시형 숙련집약형 산업의 육성



2 정책건의사항

3) 중앙정부의 차등지원 정책체계 구축

☞ 지방의 고급 일자리 창출

-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지방대학 교수들의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2~3년 연장하여 고급두뇌의 지방정착 기회를 확대
- 기존 지방기업 및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금융,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운용 시 지방의무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확대 지원 등이 필요

☞ 저발전지역의 내발적 발전역량지원 강화

- 소도읍 및 도서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신활력사업' 과 유사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이 필요
- 각 소도읍 또는 저발전지역의 시·군별로 매년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직접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
- 지자체별로 내발적 발전역량을 토대로 차별화 전략이 성공한 사례 : 경남 함양군과 전북 완주군 (귀촌·귀농시책을 토대로 인구증가), 경북 봉화군과 경남 산청군(인구 감소추세 완화), 전남 영암군 (활발한 기업유치), 전남 곡성군(기차관광상품으로 관광객 증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 참조

감사합니다

